

감찰·경보에도 ‘끊이지 않는 광주경찰 음주비위’

서부경찰 경감 음주사고 입건 올해만 4번째 비위 행위 적발 지도부 ‘일탈행위 관리’ 고심

광주경찰 소속 경찰관들이 올해 들어 4번째 음주비위를 일으키면서 일선 간부급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복되는 비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한 징계와 더불어 입직 때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경찰 형사과 소속 A경감이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경감은 전날 오후 9시2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수습을 하던 중 앞차량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경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내규에 따라 사건을 북부경찰로 이첩한다.

광주경찰 비위 적발 사례는 올해 들어 4번째다. 모두 음주운전 비위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적발됐다.

앞서 3·1절 연휴에 서부경찰 모 지구대 소속 B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

량과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3차례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시민 신고로 붙잡힌 B경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서부경찰 소속 C경사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1월에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북부경찰 소속 D경위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됐다.

연일 음주비위가 터지자 내부에서도 자성과 함께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고 음주하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 광주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음주금지 동참호소문’을 통해 “타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직과 동료 보호차원에서 음주금지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집중 감찰과 ‘특별경보’ 발령에도 이같은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경찰은 지난달 일선 서를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에서도 광주경찰에 감찰반을 파견해 기강 확립 및 복무 점검 활동을 벌였다. 경찰청은 이날도 A경감이 근무하는 서부경찰에 감찰반을 보내 특별감찰을 시작했다.

서울경찰, 대구경찰 등에서도 비위 행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안 회의를 열어 3월8일~4월11일

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현장 관리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광주경찰 간부는 “항상 직원들에 ‘혹시 술자리를 가게 되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라’고 당부하지만 사고 발

생을 막을 수 없다”며 “설령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직원이 있다 해도 그 직원을 24시간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내부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각서를 쓰고 지정 운동을 해 봐도 소용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현재 음주비위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다. 다른 직업과 달리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이다. 처벌이 약해서 비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입직 때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u.kang@jnilbo.com



동구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발대식 광주 동구 교통안전지킴이들이 4일 동구청에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있다. 교통안전 지킴이는 관내 7개 초등학교 저학년 75명을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나선다. **광주동구제공**

여수·나주서 작업 근로자 추락 심정지·사망

전남에서 작업자 추락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오전 8시22분께 여수시 광무동의 4층 규모 아파트 작업 중 옥상에서 작업자 A(71)씨가 추락했다. 이날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방수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선 2일 오전 나주시 송월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 A씨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공사장 리프트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공사업체 관계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여자친구 살해 유기’ 전 해경 항소심 징역 25년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25년 선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15일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룬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좁은 창문으로 도주한 최씨는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송민섭 기자

주말 포근한 봄날씨

주말 광주와 전남지역은 내리던 비가 그치고 기온이 점차 올라 따뜻하겠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비가 5일 새벽까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기온은 비가 그친 후 점차 오르겠다. 5일 아침최저기온은 8~10도, 낮최고기

온은 17~20도가 되겠다.

6일 아침최저기온은 6~10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측됐다.

주말동안 아침 기온은 6~11도로 평년보다 2~5도가량 높겠다.

특히 일요일인 7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24도까지 올라 5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다.

정성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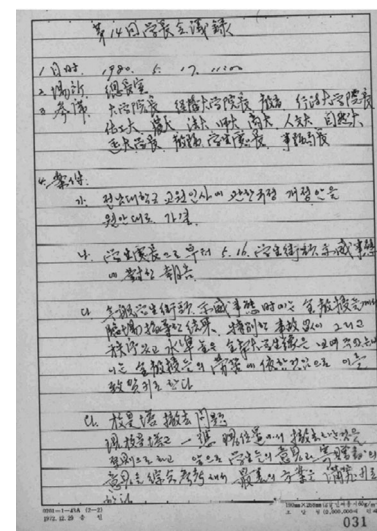
“시위 질서있고 수준 높아” 5·18 당시 전남대 학장회의록 공개

5·18기념재단, 정보공개청구

5·18민주화운동 전후 광주 상황이 담긴 전남대학교 ‘학장회의록’이 44년 만에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시민들의 가두시위가 질서 있게 이뤄졌다’는 기록이 있어 ‘광주 시위가 격렬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극우세력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됐다.

4일 5·18기념재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남대학교로부터 입수한 학장회의록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

1980년 5월17일 작성된 해당 문서에는 당시 전남대 학생처장의 5·16 학생가두시위 사태에 대한 보고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학생처장은 민족민주성회 마지막 날인 5월16일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시민 주도로 열렸던 가두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질서 있고 수준 높았다’고 평가했다.



기념재단은 “광주 지역의 시위가 격렬해서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다”고 설명했다. 기념재단은 5·18 항쟁이 끝나고 두 달

여가 지난 7월7일 회의록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개강에 대비한 학생지도 대책수립’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대학 간 의견 교환과 학생 지도의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기관협의회 등 기구를 구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비교란에는 ‘전교위(전국교육위원회)’, ‘도경(전남도경찰)’, ‘505(505보안부대)’, ‘CIA(중앙정보부)’ 등 자문기관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적혔다.

이와 관련 재단은 “신군부가 대학 개강을 앞두고 강력한 대비책을 꾸려 5·18 이후 학생 탄압에 앞장섰다”고 해석했다.

한편, 재단은 전국 국립대를 대상으로 5·18 전후 학장회의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전남대를 제외한 타대학들은 부존재 또는 비공개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강주비 기자**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연루 일행 징역형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 선정 주도 유치원장은 징역 2년 6개월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각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404호 법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원장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90만원을, 모 유치원 원장 B(5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치원 관계자 C(55)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D(55)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E(56)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평가 자료 등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

정을 바라는 유치원 원장 B·C씨에게 접근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성 뇌물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당시 현직이던 최영환 전 시의원에게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업 관련 평가 기준 등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이었던 E씨로부터 전달받고 2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공정해야 할 시교육청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범행이다. A씨는 다른 유치원 원장들이 사업에 선정되길 원하는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공무원 대상 청탁과 내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는 데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형사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